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달 재가동... “1000본 생산 시작”

## 화재 발생 5개월만 외부 고무 유입... 1공장+불에 타지 않은 2공장서 생산 재개

대형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내달 재가동에 들어간다.

화재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제1공장을 중심으로 하루 1000본을 시작으로 연내 4000본까지 생산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4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지난 5월 화재가 발생한 제2공장과 무관했던 제1공장과, 불에 타지 않은 2공장 일부를 활용해 다음달부터 타이어 생산에 들어간다.

기존 1공장에서는 반제품을 결합하는 성형공정과 타이어 형태로 만드는 가류공정이 이뤄지는데, 반제품을 만드는 설비만 추가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고무를 이용해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고무를 제조하는 정련공정은 100% 소실된 만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등에서 고무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제품 일부도 곡성공장에서 반입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어 생산 이후 공정은 2공장 가운데 불에 타지 않지 50~60% 공간에 있는 검사공정, 선별 공정, 출하 공정 등을 거치면 완제품을 출하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하루 1000본을 시작으로 연내 4000본 생산을 목표로 세웠으며, 이후 성형·가류 공정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면 하루 1만본(연간 350만본) 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이 재가동되면 광주공장 소속 근로자 1800여명이 순환근무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다행히 1공장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고무를 외부로부터 들여와 타이어를 만들 수 있다”면서 “1000본부터 시작하지만 근로자들이 순환근무를 통해 생산능력을 끌어올리고 단계적으로 합평 이전도 추진하면 고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1단계로 연 530만본 생산을 위한 공장을 2027년 말까지 합평빛그린산단에 건설해 2028년 1월 본격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광주공장 부지 매각 시 1공장은 합평신공장으로 이전, 이후 2단계 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재 구성원에 대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원자재 제련동에서는 지난 5월17일 화재가 발생, 부지(15만㎡) 중 3분의 2 가량이 타거나 그을리면서 조업이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2공장 원자재 제련동 등의 해체작업은 11월까지 진행된다.

/전민규 기자

# 광주시, 호우피해 주택 900만원·소상공인 1000만원 추석 전 지원

## 긴급 복구비 822억원 투입... 신안교 배수펌프 설치 등 침수 예방시설

광주시가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빠르게 복구 될 수 있도록 822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주택침수 900만원, 소상공인 10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복구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민생 안전과 침수 예방을 위한 복구 사업비 총 822억원을 긴급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지역은 지난 7월 17일 하루 동안 426.4mm의 비가 내려 1939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일강수량을 기록했으며 19일까지 3일동안 지속돼 곳곳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했다.

극한 호우로 인해 2명이 숨졌으며 286가구 41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 시설피해

는 1만 5000건, 328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 복구 전역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등 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우선 광주시는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금을 확대해 258억원 투입하고 주택 침수피해를 입은 가정에 900만원,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12월까지 상생카드 할인율을 13%로 확대시행 하고, 특별재난지역인 복구와 광산구 어룡동·삼도동에서 상생카드로 결제하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5% 캐시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긴급복구와 함께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중장기 대안을 마련해 신속 추진한다.

이번 호우피해 이력이 있는 주택과 상가에 차수판

설치비를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저지대 등 침수 우려가 있는 일반 주택과 상가도 확대 지원을 검토한다.

피해가 컸던 신안교 일원은 응급 대책으로 용벽하부 배수구와 상부 아크릴판 철거로 배수능력을 개선하고 침수 방지를 위해 총 사업비 610억원을 들여 신안교 교차로 일원 저지대 배수펌프 설치, 서방천 하천폭 확대, 신안철교 재가설, 용봉천·서방천 합류부 분리벽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산구 우산지구, 복구 문흥성당 일원, 복구정 사거리 일원, 신안교 일원에는 우수 저류시설 설치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행정안전부 5개년 계획에 농성, 쌍촌2, 백운, 송정, 평동 등 5개소를 단계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영산강 인근 서구 서창동·마북동, 복구 용강동·신용동 일원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저지대 구간인 남구 빗고을공예장차촌 일대는 배수시설 정비로 통해 반복적인 수해에 대비한다.

/송현근 기자

# 광주·전남 음주운전 사고 최다발 지역... ‘광산구·여수’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각각 광산구와 여수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기초 지자체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

에서는 광산구가 698건으로 가장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뒤이어 복구 650건, 서구 610건, 남구 200건, 동구 131건 순이었다.

관련 사망자 수는 복구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산구 9명, 서구 4명, 남구 3명, 동구 1명 순이다.

전남에서는 여수가 520건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빈번했다. 목포 450건, 순천 373건, 광양 291건, 나주 228건, 해남 124건, 무안 113건 순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해남 9명, 순천 7명, 목포 6명 순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특정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 전수조사·처벌부터... “편차 해소 고민도”

지자체·교육청, 봉선2동 위장전입 적발 전무... ‘눈 가리고 아웅’ “기관간 소통·협업, 실태부터 알아야”... 매년 적발 서울과 대비 ‘뒤틀린 계층 상승 욕구’ 탓... “공교육 상향평준화·특화 정책을”

## 뒤틀린 교육열, 불법전입

불법 전입을 근절하려면 행정·교육 당국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장전입 의심 신고 장구를 마련하고 사실 확인 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주기적인 단속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광주교육청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주소지만 학교 배정지 안에 옮겨두고 원정 등·하교를 하는 ‘위장전입’이 봉선2동 내에서 적발된 사례는 최근 전무하다.

현재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전입신고 접수 세대가 신고한 주소등록지에 통장을 보내 사실 확인을 거친다. 통장 방문 때 부재 중이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2차 조사를 나간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꺼리거나,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시늉하며 번번이 ‘허탕’을 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안팎에서는 학군지 위장전입 의혹을 주장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인 남구도, 교육청도 ‘알면서 모르는 척’ 방관하며 제대로 된 실태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지역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이대로 방치하면 학군 불균형 현상과 사교육비가 증가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구청·교육지원청·학교가 경찰과 함께 정기적으로 실거주 확인, 즉 단속을 벌여야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불법 전입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원조 ‘강남 8학군’ 내 위장전입이 횡행하는 서울에서는 교육청이 지자체 협조를 얻어 매년 각급 학교 단위로 위장전입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한 해에만 위장전입 102건을 적발했다.

위장전입 적발 시, 원래 주소지와 학교로 되돌리는 ‘환원 조치’와 전학 제한 조치 등도 하고 있다.

결국 광주 봉선2동 내 위장전입 실태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행정·교육 당국의 의지 부족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정확한 전수 조사 필요성에 힘을 실는다.

위장전입 적발 시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적발 대상자에 대한 학교 환원 조치 등 실질적인 근절 대책도 시행돼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교형 총 상임활동가는 “위장전입 실태 파악

은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여러 눈치를 보며 안 하고 있는 셈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학부모 면담, 등·하교길 통학 지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정확한 거주지, 가족의 생활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당국이 위장전입 사실을 보다 빨리 알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중심의 실거주 확인 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학교가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있다면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체계 또는 장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경아 남구의원도 “교육 영역이라는 이유로 행정 당국이 불법에 대해 오히려 무관심했다고 볼 수도 있다. 전입 신고 이후 실거주를 판별하기 어렵다면 통장 뿐만 아니라 인력을 보강해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교육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위장전입에 대해 자녀가 공부할 열심하는 환경 속에서 성적을 올리고, 이른바 부자 동네에서 맺는 인적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갖길 원하는 사회적 욕구가 뒤틀린 탓이라 분석했다.

때문에 인간의 계층 상승 욕망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위장 전입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위장전입 문제는 우선 범법 사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위장전입이 확인된 학생의 전학 등 후속 조치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반적인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거주지를 떠나 다른 학군지 내 학교에 갈 필요 없이 ‘내 집 앞 학교’를 가장 좋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교육 정책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교육의 목표가 ‘내 집 앞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가 돼야 한다. 쉽게 말해 곳곳에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부족한 학교에는 우수 교사를 우선 배치하거나 대대적인 예산·시설 투자를 수반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학군지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오권철 기자

#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